근대 한국 민사판결의 편차와 기술(記述)의 분석

- 법원 소장 판결문를 중심으로-

이승일*

목차

1. 서론
2. 판결문의结构과 판결문 분석
3. 민사판결의 편차와 기술(記述) 항목의 분석
4. 판결문의 기술(記述) 항목 분석

[국문 요약]

법원기록보존소에는 근대 민사판결문이 다양 소장되어 있다. 이 판결문들은 토지, 가옥, 대업, 상거래 등의 민사 분쟁을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토지 및 가옥의 거래, 임차료(賃金), 이자, 대업 등 사회경제적 정보까지 문부하게 알려주므로써 근대 이행기의 사회상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아카이브 역할이다.

그리고 이 민사판결문에는 근대기시 사회제도의 변화와 함께 침략과정을 거치면서 다양한 기록자들의 충성이 남아있다. 민사판결문은 이러한 변화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연구되어야 한다. 이 점을 주목하여 민사판결문의 전후, 전략, 정책, 과정 등을 살펴보며 민사판결문 연구에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주제이] 재판소, 민사판결문, 토지, 가옥, 법원기록보존소


2) 문책명, 전략, 민사판결문, 판결문(서울, 2012).

3) 이문명, 민사판결문 구조론 결과, 도주 등, 법원기록보존소(서울, 2011).

* 강동원주대 사회과 조교수, bluear89@hanmail.net

Ⅰ. 머리말

법원기록보존소에는 근대 민사판결문이 다양 소장되어 있다. 이 판결문들은 토지 및 토지 관계, 분양(賃借), 거래(買賣), 채권-채무관계, 여유, 소작 및 도시(市街), 상거래 등 사인(私入) 상호간에 일어날 수 있는 대부분의 분쟁과 재판의 결과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토지 및 가옥의 매매가격, 임차료(賃金), 이자율, 대업 등 사회경제적 정보까지 문부하게 알려주므로써 근대 이행기의 사회상을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한 아카이브 역할이다. 이 자료를 통하여 대한제국인의 일상 생활이 구체적으로 어떠하였는지, 각종 분쟁이 새로운 사법체계 하에서 어떻게 규율되는지에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민사판결문의 자료적 가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은 형편이다. 그 이유는 법사학을 전공하는 연구자들만이 많지 않은 만큼이나 법원기록보존소가 소장하고 있는 일부의 판결서가 2009년에 학계에 공개되었고, 판결서의 일부가 논란이 곤란하여 학계의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졌기 때문이었다.

법원기록보존소에 소개한 판결문은 대법원의 형상적 변화를 연구하는 재판사 분야이다. 이 연구에서는 판결문의 형상적 변화에 주목하여 재판소의 종류 및 성격, 재판 사무, 소송제도 등을 주로 연구하였다. 이를 통하여 한국에서 근대 사법제도가 어떻게 타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일어난 사법생활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법원기록보존소의 적절한 활용은 사회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토지 판결문을 중심으로 대법원 판결문연구와 외국인
과의 민사분쟁을 분석하였으며 법과 재판을 소개로 연구를 개척하였다.  

근대에는 극단리학의 중심으로 민사관계에 대인의민사학적 분석이 수행되었다. 이 연구들은 민사관계의 소장 현황을 소개하고 소송의 유형과 그 성격이 조사되므로 판결은 연구에 필요한 다양한 내용을 제공하였다. 다만, 이 연구들은 첫째, 민사관계를 적절 분석하지 아니하고 법원도자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각종 통계자료에 의존하는 채계가 있다. 이에 따라서 해당 판결문들은 언제, 어느 기관에서 수리,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는데 대해서는 밝히지 못하고 있다. 둘째, 판결문의 분석에서 중요한 판결문의 구성 요소 및 목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얻고 있다. 예컨대, 일부 민사관계는 목차가 부재하고 목차에 가까워져 있는 것이 아닌, 사건 자체가 판결문을 작성한 시점에 부재한 것인지 아닌지 조사총독부 또는 한국 정부 수립 이후에 세월에 밀려진 것인지, 또한 사건목차판결문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셋째, 기년의 연구들은 난징의 판결문을 토대로 각종 통계정보를 체계하고 있기 때문에 핵심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재판사례의 결과와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 판결문은 난징정보 뿐만 아니라 편익정보까지 종합적으로 분석되어야 한다.


4) 혜성정·이영철, 『법조-변법학연구』, 1995-1991년 민사관계문헌활성화연구, 『변법학연구』, 430변법학회, 2015; 자정명·경상우, 『민사관계법 제1조 및 변법학연구 사전 분석에 관한 연구』, 『변법학연구』, 63(한국사학연구, 2015).

5) 사건목차는 두 번째 결과서 결과적으로 보이다. 첫 번째는 조건총독부가 한성도서관 및 고등도서관(구립도서관) 등의 민사관계문헌을 제공하면서 합법된 기록을 가지고 사실관계를 복구하였다. 두 번째, 변법학연구에서 2000년도의 민사관계문헌을 DIO로부터 다음과 같은 관련자료를 여려 가게 기록을 수행하였는데 이 때 다른 사전목차를 제공되지 않았다. 조건총독부 및 법령도서관이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이용자에게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되나면 수신자 기록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정을 유지하여야 한다.

6) 변법학연구 기록관계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은 다음의 논문 참조 이이영,『대한제국 시기의 기착관계의 민사관계』는 한국의 재판소에서 생성되었으나 일제에 의한 한국 사법절차의 양상으로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 1907년부터 일본인 법무란관과 주요 재판소에 인용되어서 사법절차와 재판에 갑갑하였고 1907년 12월 재판소법시가 전부 개정된 이후에는 1907년부터 일본인 판사, 검사, 서기 등이 대거 인용되기 때문이다. 일본의 사법제도 간섭은 판결문의 작성과 판결 및 경리 방식 등 영향을 주기 마련이다. 특히, 1907년부터 재판을 실시하게 시작한 재판소는 전부 재판기관이 가지고 있던 판결문의 일부를 인용하였고, 1910년 한국정부 이후에는 조건총독부 재판소가 해당 판결문을 인수판에서 판결, 재결리하였다. 이 과정에서 목차와 표지가 새로운 판결문으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점에 주목하여 민사관계문헌의 생산, 판결 및 경리 과정을 살펴보면 민사관계문헌 연구에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본 연구는 범위극한문헌소가 소장하고 있는 판결문 400여권(1895-1910년 사이에 생산된 자료를 전부 조사한 것은 아니고 법원도자원 홈페이지에 제공하고 있는 151책만 대안으로 조사하였다. 또한 실재적으로는 전라도, 경상도 지역의 판결문의 현황을 파악하지 못한 점이 큰 한계이다.

II. 재판사례의 절차와 재판 관련 기록

한국에서는 1895년 3월 25일 법률 제1호로 재판소구구법이 제정되어서 소송의 절차, 재판의 방식 등에서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이 법률의 시행 전까지 한국에는 전문적인 재판소가 설치되지 않았고 민사와 형사의 구별도 없었으나 재판소구법 제정은 재판으로서의 재판소, 판사 및 재판관연설, 순

리, 『법조학연구』, 19(한국사학연구, 2009); 이영철, 『동양국의 법조학적 조사』, 『법조학연구』, 41(한국사학연구, 2014); 권창훈, 『민사관계법 관련 법학과』, 『법조학연구』, 41(한국사학연구, 2008).

7) 변법학연구에서는 해당 기록을 "구한말 민사관계문헌"이라고 명명하고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근대 민사관계문헌으로 부여하기로 한다.
회계관소, 고등재판소, 특별법원 등의 전문 재판관관의 설치가 제도화되었고 각 재판관의 역할과 기능도 약속히 규정되었다. 우선, 기업재판관은 일제의 민사 및 형사사건을 관할하도록 하였고, 형사 및 형사재판관은 관련 구역 내의 일제의 민사 및 형사재판과 외국인 및 조선인 사이의 분쟁을 관할하도록 하였다. 이 같은 재판관 관에 대한 상소심 재판관소로서 순환소재도가 규정되었는데, 개정형제관소 및 각 지방재판소의 상소를 담당하였다. 이에 따라 형사재판관소에 관제에 불과한 상소를 관할하도록 하였고 때로는 개방형계관소, 형사재판소의 관절에 대한 상소심도 관할하는 등 기능이 강화되었다.

하지만 각급 재판소 중에서 실제로 개설된 것은 한성재판소와 고등재판소 뿐이었다. 순회재판소는 개설된 적이 없었고 지방재판소는 각도의 감정업률, 개성형계관소는 감리사에 각각 합성되었으나 관판사, 관판사 뿐이 관판을 겸임하는 등 전임 관판사를 대대로 임용하지 않았다. 10) 재판소구 성립은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조직 및 운영이 전면 개편되지 못한 이 유로 새로운 재판소를 설치, 운영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선, 법정은 관할을 분리하게 되면 중전 지방관이 행사하던 권리를 박탈하여 야졌기 때문에 반발을 초래하였다. 또한, 재판소 설치와 전임 서법관을 임용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었으며 적정의 사법관료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였다. 이에 따라 지방관의 반발을 우려하면서 예산과 시간을 줄이는 임시 방안으로 기존 조직과 인원들에게서 재판소의 직책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선, 판사는 별도의 사법관 직책인 법정(정법관)을 문자상 역할 또는 별개 문서를 기재하여 사법관에 부하하고 문서의 처리(업무)에 임시(임시)에 제공하지 못한 벌은 후일 제출할 기한을 미리 정하여 사법관에게 하부하도록 하였다.(제4조) 특히, 재판관제도 기타 중요한 문서는 판사에 직접 작성하도록 하였다(제5조). 심판하는 사건의 순서는 각급 또는 각 판사가 도착하는 시간의 순서의 지방에 따라 행해지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순서를 변경할 수 있었다(제7조). 11) 재판소의 시기는 판관(정법관)이 법부대신이


[11] 《사법의구성원법》 제1조, 1905.3.25, 《해외로간재판법》 제1조, 1905.3.25, 《해외로간재판법》 제2조, 1905.3.25, 《해외로간재판법》 제3조, 1905.3.25, 《해외로간재판법》 제4조, 1905.3.25, 《해외로간재판법》 제5조, 1905.3.25, 《해외로간재판법》 제6조, 1905.3.25, 《해외로간재판법》 제7조, 1905.3.25, 《해외로간재판법》 제8조, 1905.3.25, 《해외로간재판법》 제9조, 1905.3.25, 《해외로간재판법》 제10조, 1905.3.25.
임명하였는데, 범죄 내일의 일체의 신문, 공신, 변론, 변론, 변론 등을 기록하고 소급사건에 관한 서류 일체를 보존하는 업무를 맡당하였으며 이 외에도 기타 재판관의 사사(私事)에 관한 사무 일체를 수행하였다. 재판장의 개정(開廷)은 재판소 또는 그 지정에서 행하고 법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판소 및 그 지정 외에서 개정(開廷)할 수 있었다. 민사 및 형사의 재판장(開廷)은 일체 공개하여 방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1895년 4월 28일에 민형소송규정을 발효하여 민사 및 형사소송 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하였다. 이 규정에 의해서 중대한 재판 관례가 전면 폐지된 것은 아니지만 근대의 소송제도를 일부나마 시행한 측면이 있었다. 우선,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절차를 구분하고 그 절차를 법적으로 정하였다. 또한, 근대적인 심급제도의 관례에서 소소결정을 정하며 재판 결정의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였다. 셀대, 소송당사자의 신문, 지위에 관계없이 대리인(代理人)에 의한 소송대리가 허용되었다. 특히, 재판에 소송하는 각주 서류가 크게 변화하였다. 원래, 조선 재래의 소송 및 관례는 일반적으로 소장(訴状)을 관례에 올려 그 내용을 검토하고 해당 소장(訴狀)에 수령의 결정사항을 작성하여 돌려준다. 그 후, 보통 재사(訴事)라고 정하였다. 전통 사례에서는 분쟁의 내용을 수령이 검토, 결정한 후에 결정문을 돌려준다고 하여 관례에서는 소장의 주제, 절차, 과정 및 최종 결정 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별도로 소장의 내용과 관례의 결정사항을 간단히 기록하여 두었다. 그러나 민형소송규정에서는 소장 관련 서류를 공식화하였고 판결서를 직접 작성하도록 하였다. 우선, 소장은 제거하기 위하여 원고 및 피고가 일정한 양식의 소장(訴狀) 및 답변(答書)을 작성, 제출하도록 하였다. 민사사건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원고는 소장(訴狀)에 본인의 성명 및 주소를 기록하고 상대방(被告)의 성명 및 주소를 기록한 후에 주장을 요구하고 사실관계를 판단하기 기록하였다. 피고도 소장의 형식과 마찬가지로 본인 및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기록하고 변론(陳論)의 요지와 사실관계를 기록한 후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모든 사건을 대상으로 소장은 작성하도록 하였던 것은 아니라 소장에 관한 경우는 구체 번역으로 하도록 하였다. 예컨대, 민사 소송을 당구하는 급변과 급변을 막아서 염전 50냥 이상이 속하는 것은 소장 및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구설(訴書)으로 하도록 하였다.

---

14) 「判事職務規則」(법무, 1895.3.29), 「判事職務規則」(民法, 1926.
15) 「判事職務規則」(判事職務規則), 「判事職務規則」(判事職務規則), 「判事職務規則」(判事職務規則), 「判事職務規則」(判事職務規則), 「判事職務規則」(判事職務規則).
16) 「判事職務規則」(判事職務規則), 「判事職務規則」(判事職務規則), 「判事職務規則」(判事職務規則), 「判事職務規則」(判事職務規則), 「判事職務規則」(判事職務規則).
17) 「判事職務規則」(判事職務規則), 「判事職務規則」(判事職務規則), 「判事職務規則」(判事職務規則).
소송인은 제판장(庭長)에서 간습 변론하기 전에 소장(訴狀) 및 담사(答書) 외에 별도로 서면으로 자신의 주장은 담은 증거서류를 제출할 수 있었다. 소송 및 제판과정의 모든 서류는 정식(正式)하여 2통을 작성하고 도달 개정(改定)한 곳에는 적임한 적용서(印行書)하였다. 담사(答書)는 소송 개정일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또한 제판장에서는 소송인, 증인 등이 간습에서 효력과 기타 사건에 필요한 사항을 주기적 기록을 작성하여 해당 판사 및 서기의 기명(記名)하고 양인(押印)토록 하였다.19)

소송사건은 접수 순서에 따라 변호를 부여하고 그 순서대로 심판하도록 하였다. 판결은 경신(就審)한 후에 군바로 시행되며, 기일을 정하여 이를 행할 수 있으나 결정된 날보다 7일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였다.20) 제판소세칙에서는 민형사사건은 접수일부터 이사하여 30일 이내에 관할하도록 하여 무작정 시간을 걸면서 권리 첨부를 받지 않도록 하였다. 만약 전인(全印)21) 미결(未結)된 것이 있으면 매월말에 주명(註明)을 갖추어 보고하도록 하였다. 담 중인(中人)이 다른 곳에 있어서 부득이 소환(喚問)하여야 할 사항은 원 근에 따라서 완복하는 날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다.22)

보류, 보류할 경우, 보류한 사항을 문헌에 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밝혔다.

18) 도달 개정(改定)은 관계서를 작성한 후 수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 글씨에 연명(連名)이 붙은 후에 군바로 법정을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19) 「의정부법령」(民法) 제37호 『民法』 제37조 『民法』 제37조 
20) 「의정부법령」(民法) 제37호 『民法』 제37조 『民法』 제37조 
21) 이때는 특별 사안과 다른 사항에 있어서 관할이 있는 것을 말한다.
22) 「의정부법령」(民法) 제37호 『民法』 제37조 『民法』 제37조
일본인 사이의 분쟁도 일부 수록하고 있고 한국 내에서 발생한 사건이 때
문에 조사할 필요가 있다. 범람기록보존소가 원문을 공개한 151건, 14,500여
건을 연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범람기록보존소 민사판결서 간수(1889~1918년)

<table>
<thead>
<tr>
<th>연도</th>
<th>1889</th>
<th>1893</th>
<th>1894</th>
<th>1895</th>
<th>1896</th>
<th>1897</th>
<th>1898</th>
<th>1899</th>
</tr>
</thead>
<tbody>
<tr>
<td>검수</td>
<td>2</td>
<td>2</td>
<td>2</td>
<td>2</td>
<td>2</td>
<td>2</td>
<td>2</td>
<td>2</td>
</tr>
<tr>
<td>연도</td>
<td>1900</td>
<td>1901</td>
<td>1902</td>
<td>1903</td>
<td>1904</td>
<td>1905</td>
<td>1906</td>
<td>1907</td>
</tr>
<tr>
<td>검수</td>
<td>18</td>
<td>18</td>
<td>18</td>
<td>18</td>
<td>18</td>
<td>18</td>
<td>18</td>
<td>18</td>
</tr>
<tr>
<td>연도</td>
<td>1908</td>
<td>1909</td>
<td>1910</td>
<td>1911</td>
<td>1912</td>
<td>1913</td>
<td>1914</td>
<td>1915</td>
</tr>
<tr>
<td>검수</td>
<td>3</td>
<td>3</td>
<td>3</td>
<td>3</td>
<td>3</td>
<td>3</td>
<td>3</td>
<td>3</td>
</tr>
<tr>
<td>합계</td>
<td>145</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14,500여건에 달하는 판결서는 난징이 아니라 여러 판결서를 묶은 판결
형태로 보아나 있다. 각 판결서는 재판을 직접 수행한 기관에서 작성한 후에
난징 형태로 보관해 오다가 후일 어느 시점에서 표지, 목차 등이 새롭게 작성되
판결되었다. 이렇게 추정하는 이유는 표지와 목차의 재판상태가 판결서 원본의
재판 상태와 상이한 뿐만 아니라 일부 판결서가 뚫려(분실)된 채 편집되어
있고 전혀 상이한 재판기관의 판결서가 편집되어 있는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각각 재판소와 난징 형태로 보관하다가 판결의 과정을 거치며 시기는
일제의 사법참여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1895년 재판소구
성법이 제정된 이래로 재판조직과 재판서무에 큰 변화를 일으키는 시기가
1908년과 1910년이다. 1907년 12월에는 재판소구성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1908년부터 전국 각지에 재판소가 신설되었고 각 재판소에 일본인 판사, 검
사, 서기 등이 대량으로 임용되어 판결서를 정리, 편집, 보관하는 기대에서
일본식이 도입되기 때문이다. 또한 1908년에는 민형소규칙이 제정되어 재
판사무절차와 방식도 일부 변화하였다.33) 뿐만 아니라 1910년 한국병합 후
에는 조선총독부 재판소로 변경되면서 조선총독부 재판소서무규정에 따라서
판결서가 관리되었다. 뿐만 1908~1909년 한국 재판소에 일본인 사법관이
대장으로 배치되면서 중앙 재판기관의 판결서들을 이관하여 정리하였거나
1910년 한국병합 이후 어느 시점에 조선총독부가 정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판결서 주목하는 이유는 대정제국의식과 신헌치기를 겨려면서 판결서의
보존과 관리의 혼란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명목 교수는 대정제국
기의 판결서가 많이 유실된 것으로 추정하면서 그 근거로서 판결서에 표기된
사건번호가 누락된 것이 있고 또한 판결서의 이용방식 없는 땅에 몇 몇 혹은
몇 주의 간격이 사기의 자주 나타나다는 점을 들고 있다.34) 이명목 교수의
추정은 매우 설득력이 있으나 사건번호는 소송사건의 접수번호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호수의 겸수는 다음 자료를 통해 일부 보완할 필요가 있다. 물론,
당사자간에 화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마지막 수령으로 재판서에 보관소호이
나는 점에서 사건번호는 판결서의 수용자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을 배경할 수
없다. 하지만 사법제도가 정비되기 시작한 당시에 보수 분쟁이 소송서부터 선
고로까지 이루어져 판결서를 작성하였다는 보기는 어려지 않음. 재판서는 참
여하여 선고에 이르는데 많은 시간, 비용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일부는 당사
자간의 화해해제나 소송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도 많은 것이었다.

다음 흐름으로, 판결서는 누락된 것이 많은 경우도 있다. 조선총독부가
작성한 판결서에서에는 재판일자, 사건번호, 사건목록 등이 재판 관련 정
보가 관리가 기록되어 있는데 비판에 "재판서"라고 표기된 사례가 있다.
이는 재판이 종결되어 판결서까지 작성되었으나 목차 작성 시에는 판결
서 원본이 분실되며 편집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 같은 사례는 이명목
교수의 추정에 상당한 설득력이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분실 및 유실의 시기
를 추정하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십미치기에 이어 판결서

32) 「재판소구성법」 제2조, 1907.12.23.
33) 이명목, 「한일외국인대상 민사 재판의 구조와 심리」, 『범죄사회, 41』(범죄사회학회, 2011), 183쪽.
의 유실이 있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다.

만약, 각 관청과 관련된 서류와 그 과정에서 부각된 다양한 관리 혼란의 의미를 알 수 있다면 관청의 누락 여부를 추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로 위해서는 우선 민사판결문이 전달되어 있는 상태부
터 조사할 필요가 있다. 봉원기록보존소에서도 소장하고 있는 민사판결문은 모
두 제1권부터 제5권까지 각각 권번호가 빠짐없이 부재되어 있다. 원래의
민사판결문에는 권번호가 부재되어 있지 않았으나 봉원기록보존소에서 해당 판
결문들을 이관받아서 관리하면서 헌의상 부재한 것이다. 국가기록원에 소장
되어 있는 민사판결문에는 이 같은 권번호가 부재되어 있지 않은 것을 통해
서도 알 수 있다. 다만, 권번호의 기준이 일관되지 못한 흔이 있다.

예컨대, 1895년 4월 22일에 민형소송규정에 입각한 최초의 관청서 작성
되는지 이 관청서는 제1권이 아니고 제2권에 수록되어 있다. 1895년에 생
산된 관청서들은 모두 제26권, 제27권, 제28권, 제29권의 번호가 부재되어
있다. 제26권은 1895년 9월 1일부터 같은 해 11월 1일까지 한성재판소에서
생산된 86건의 관청서로 구성되어 있고, 제27권은 1895년 6월 4일부터
1907년 12월 17일까지 고등재판소와 평리원에서 생산된 39건의 관청서로
구성되어 있다. 제28권은 1895년 4월 22일부터 같은 해 8월 17일까지 한성
재판소가 생산한 123건의 관청서로 구성되어 있다. 제29권은 1895년 4월 29
일부터 1899년 7월 6일까지 한성재판소, 고등재판소, 평리원 등에서 생산된
98건의 관청서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 반해서 제1권은 표지에 '공주기판소'가 제작기관으로 표기되어 있는
데 공주군과 경산군(서리 청량군수 관할)이 1906년부터 1908년까지 생산한 48
건의 관청서가 묶여 있다. 제2권의 표지에는 '공주기판소'가 제작기관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1908년 8월부터 12월까지의 관제서 33건이 묶여 있다. 제3
권의 표지에는 1899년부터 1909년까지 공주지방재판소가 생산한 것으로 기
록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충청남도재판소, 충청북도재판소, 공주군수, 해미군
수서서산군수 등이 작성한 관청서로 묶여 있다. 제1권, 제2권, 제3권 중에
서 표지와 관절서 원본을 대조해보면, 제작기관이 일치하는 것은 제2권뿐이
다. 공주지방재판소와 공주지방판소는 1908년 8월 1일에 개정되었기 때문
에35) 제1권과 제3권의 관청서들은 기존 제작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다. 공주
기판소 및 공주지방판소가 설치된 이후에 표지와 목차가 새롭게 제작된
것으로 보이게 된다. 또한, 제1권부터 제4권까지는 모두 충청남도 지역의
재판기관에서 작성한 관청서들 묶은 것이다. 15권부터 24권까지는 상소심
재판기관의 관청서와 묶고 있는 제25권부터 126권은 대체로 서울 지역의 관
청서(사정 및 동문) 면역법과 상소심 제작기관의 관청서가 묶여 있다. 이 중에서 경기재판소와 인천항 제작소의 관제서도 찾아 있다.

제27권부터는 인천 및 경화 지역의 관청서(인천 지역의 이사정 및 영사관
관청서 포함)로 묶어 있다.

<table>
<thead>
<tr>
<th>제목</th>
<th>관청서 권수</th>
<th>관청서 정지</th>
<th>관청서 종류</th>
<th>관청서 종류</th>
</tr>
</thead>
<tbody>
<tr>
<td>공주기판소</td>
<td>16</td>
<td>미완성</td>
<td>한성재판소</td>
<td>한성재판소</td>
</tr>
<tr>
<td>공주기판소</td>
<td>17</td>
<td>동감부 법원</td>
<td>한성재판소</td>
<td>한성재판소</td>
</tr>
<tr>
<td>공주지방판소</td>
<td>18</td>
<td>고등법원(1909-1910)</td>
<td>한성재판소</td>
<td>영리판(한성재판소)</td>
</tr>
<tr>
<td>충남도판소</td>
<td>19</td>
<td>미완성</td>
<td>한성재판소</td>
<td>한성재판소</td>
</tr>
<tr>
<td>충남도판소</td>
<td>20</td>
<td>미완성</td>
<td>고등재판소(한성재판소)</td>
<td>한성재판소</td>
</tr>
<tr>
<td>공주기판소</td>
<td>21</td>
<td>공장소관</td>
<td>한성재판소</td>
<td>한성재판소</td>
</tr>
<tr>
<td>공주기판소</td>
<td>22</td>
<td>공장소관</td>
<td>한성재판소</td>
<td>한성재판소</td>
</tr>
<tr>
<td>공주기판소</td>
<td>23</td>
<td>공장소관</td>
<td>한성재판소</td>
<td>한성재판소</td>
</tr>
<tr>
<td>공주기판소</td>
<td>24</td>
<td>공장소관</td>
<td>한성재판소</td>
<td>한성재판소</td>
</tr>
<tr>
<td>공주기판소</td>
<td>25</td>
<td>공장소관</td>
<td>한성재판소</td>
<td>한성재판소</td>
</tr>
<tr>
<td>공주기판소</td>
<td>26</td>
<td>한성재판소</td>
<td>한성재판소</td>
<td>한성재판소</td>
</tr>
<tr>
<td>공주기판소</td>
<td>27</td>
<td>평리원</td>
<td>한성재판소</td>
<td>한성재판소</td>
</tr>
<tr>
<td>공주기판소</td>
<td>28</td>
<td>한성재판소</td>
<td>한성재판소</td>
<td>한성재판소</td>
</tr>
<tr>
<td>공주기판소</td>
<td>29</td>
<td>한성재판소(한성재판소)</td>
<td>한성재판소</td>
<td>한성재판소</td>
</tr>
<tr>
<td>공주기판소</td>
<td>30</td>
<td>한성재판소</td>
<td>한성재판소</td>
<td>한성재판소</td>
</tr>
<tr>
<td>공주기판소</td>
<td>31</td>
<td>한성재판소</td>
<td>한성재판소</td>
<td>한성재판소</td>
</tr>
<tr>
<td>공주기판소</td>
<td>32</td>
<td>한성재판소</td>
<td>한성재판소</td>
<td>한성재판소</td>
</tr>
<tr>
<td>공주기판소</td>
<td>33</td>
<td>공장소관</td>
<td>한성재판소</td>
<td>한성재판소</td>
</tr>
<tr>
<td>공주기판소</td>
<td>34</td>
<td>공장소관</td>
<td>한성재판소</td>
<td>한성재판소</td>
</tr>
<tr>
<td>공주기판소</td>
<td>35</td>
<td>공장소관</td>
<td>한성재판소</td>
<td>한성재판소</td>
</tr>
<tr>
<td>공주기판소</td>
<td>36</td>
<td>공장소관</td>
<td>한성재판소</td>
<td>한성재판소</td>
</tr>
<tr>
<td>공주기판소</td>
<td>37</td>
<td>공장소관</td>
<td>한성재판소</td>
<td>한성재판소</td>
</tr>
<tr>
<td>공주기판소</td>
<td>38</td>
<td>공장소관</td>
<td>한성재판소</td>
<td>한성재판소</td>
</tr>
<tr>
<td>공주기판소</td>
<td>39</td>
<td>공장소관</td>
<td>한성재판소</td>
<td>한성재판소</td>
</tr>
<tr>
<td>공주기판소</td>
<td>40</td>
<td>공장소관</td>
<td>한성재판소</td>
<td>한성재판소</td>
</tr>
<tr>
<td>공주기판소</td>
<td>41</td>
<td>공장소관</td>
<td>한성재판소</td>
<td>한성재판소</td>
</tr>
<tr>
<td>공주기판소</td>
<td>42</td>
<td>공장소관</td>
<td>한성재판소</td>
<td>한성재판소</td>
</tr>
<tr>
<td>공주기판소</td>
<td>43</td>
<td>공장소관</td>
<td>한성재판소</td>
<td>한성재판소</td>
</tr>
<tr>
<td>공주기판소</td>
<td>44</td>
<td>공장소관</td>
<td>한성재판소</td>
<td>한성재판소</td>
</tr>
<tr>
<td>공주기판소</td>
<td>45</td>
<td>공장소관</td>
<td>한성재판소</td>
<td>한성재판소</td>
</tr>
<tr>
<td>공주기판소</td>
<td>46</td>
<td>공장소관</td>
<td>한성재판소</td>
<td>한성재판소</td>
</tr>
</tbody>
</table>

35) 공주기판소 및 공주지방판소는 1908년 8월 1일에 개정되었다. (조세부칙조례) 법령타, 제 11호, 1908.7.20)
대구지방재판소 판결사가 1건이 남아 있다. 충청지역의 경우에도 공주지방재판소와 공주지방재판소 판결사가 780여건으로 정해 대수를 차지하고 있다.

권번호는 한국 법원에서 부여하였으나 번호는 그 이전에 수행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 이유는 일부의 판결사지만 조선총독부 또는 대한제국기에는 별도의 권번호를 부여하였고 판결서 시행했음을 보여주는 흔적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는 표자의 목적과 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제136권은 1909-1910년에 강화구재판소가 생산한 것으로 모두 37건의 판결서가 수록되어 있는데, 표자의 외쪽 상단에 '甲番書類' (영구보존을 의미함)과 '民第九十二號'가 표기되어 있다. 이러한 표자의 작성 방식은 식민지기에 조선총독부의 공문서철에서 볼 수 있다. 특히, '民第九十二號'는 나남의 판결서가 아니라 해당 권책에 붙는 번호(권번호)이다. 제1권부터 제151권까지 번호가 한국 말단인 관리 상의 편의를 위하여 부여한 것 이란면 "民第九十二號"는 조선총독부가 권책판결서의 관리를 위하여 붙인 것이다. 다만, 모든 표에서 이 같은 권책 번호가 부여된 것은 아니며 상당수의 번호는 표지에 어떠한 표기도 없는 경우가 많다.

제38권은 권책의 주체와 시점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우선, 이 판결서는 1899년에 한성재판소
판소에서 생각된 106건의 판결서로 구성되어 있다. 제26권에는 판결서 원본에는 "한성재판소"라고 판심(판심)이 표기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제3권에서 볼 수 있도록 목차를 작성한 종이에는 '조선총독부재판소'라고 판심(판심)이 표기되어 있는 이유이다. 이는 판결서 원본은 한성재판소가 작성하였으나 목차와 표지 및 편백은 조선총독부 재판소가 직접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에도 표지에 표기되어 있는 재판기관과 판결서 원본을 작성한 재판기관과 서로 다른 경우가 많이 있다. 제151권의 경우, 표지에는 강화재판소가 작성한 판결서로 표기되어 있으나 원본은 강화군수가 1907년 9월 19일부터 동년 12월 29일까지 판결한 것이다. 하지만 강화재판소는 1907년 12월 23일 법률 제10호로 재판소구성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설치 근거가 바뀌었으며, 1909년 10월 13일에 법무부로 제26호로 설립되었다.36) 그린 데 앞 표지에 강화재판소로 표기된 것은 종래까지 강화군수가 재판한 판결서를 강화재판소가 설치되면서 이를 이관받았고 그 이후에 편백, 관행이었기 때문이다. 재판소구성법시행법 제2조에 따르면, 재판소구성법에 의하여 설치된 재판소는 재판결에 민사 행사의 소송은 분해의 재판소 및 군수가 종전의 규정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였고 제2조에서는 재판소구성법에 의하여 설치된 재판소의 재판결에 종래의 재판소 및 군수가 접수한 소송은 재정과 동시에 판결한 재판소로 이송하도록 하였다. 단 폐지된서 접수한 소송은 경상총관으로 이송하도록 하였다.37) 이에 따라서 관련 서류는 모두 이관되었던 것이다.

한편, 제26권은 1908년~1909년 사이에서 행해진 양주재판소의 판결서이다.38) 실제 판결은 고양군수, 양주군수가 행한 것으로 국문판 혼용재로 기술되어 있으며 필기도수는 뜻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표지를 일본어로 작성한 것을 표기하였으며 목차를 기술한 필기도수도 붙어나라 섹으로 추정된다. 제29권도 판결서를 작성한 사람과 표지 및 목차, 편백한 사람에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양주재판소는 1909년 11월 1일에 개청되었기 때문에39) 그 이후의 판결서가 개청 이후에 수립되었고 수면에 일본인 재판관이 있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4-1) 제28권 표지
![](그림 4-2) 제28권 목차
![](그림 4-3) 제28권 판결서

2) 민사판결서의 편백 기준

각 판결서에 어떠한 기준으로 묶여 있는가, 모든 판결서에 일관성을 보인다고 할 수는 없으나 많은 경우에 재판기관(생산기관)이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895년에 생산된 판결서 237건은 모두 4책으로 나뉘어 편백되어 있으며 재판기관으로는 한성재판소 220건, 공동재판소 17건이다. 28권은 1895년 4월 22일부터 8월 17일까지 생산된 한성재판소 판결서로 구성되어 있고 제26권은 1895년 9월 1일부터 11월 1일까지의 한성재판소 판결서로 구성되어 있다. 제27권은 1895년부터 1897년까지 39건의 판결서가 있는데 재판기관은 공동재판소와 폐지된다. 공동재판소가 1899년에 폐지되고 해당 기간은 폐지위치로 삼아서 같이 편백된 것이라고39) 제29권은 1895년 4월 29일 한성재판소 판결서에서 시작하여 1897년 7월 31일 판결서로 종결되면서 모두 98건이 합쳐져 있다. 제29권 판결서 묶음은 하급심인 한성재판소의 관

36) 『하급, 중등, 경상, 강화, 양주, 군수, 하등재판소를 개정하는법령』부칙 제26호, 『법령』1909.10.15.』.
37) 『裁判所組織法施行法』.
38) 『舊韓末民事判決文』(한국사학회 1922년).
39) 『동일부령 제28호(1909.10.21.)』『동일부령 제106호』.
40) 『裁判所組織法改正施行令(법령 제3호)』1899.5.30.』.
결과로 끝나지 않고, 이에 복복하여 상고심인 고등재판소(평리원)로 상소한 판결사건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같은 재판기관에서 생산된 판결사건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제3권대 표적이이다. 제3권의 표적이에는 공무장재판관소, 목차의 관심에는 공무장법원으로 표기되어 있다. 본문은 1899년 2월 2일부터 1901년 5월 31일까지 충청도 지역에서 작성된 16건의 판결서로 구성되어 있다. 4) 충청남도 재판소 판결서 7건, 충청북도 재판소 판결서 4건, 광주군 판결서 4건, 해미군수서 사산군수 판결서 1건 등이다. 동일한 재판기관이 아닌 여러 곳의 재판기관의 판결서 같은 경우로 묶은 것은 충청남도 지방재판소가 나중에 수필, 정리하면서 〈지적〉을 단위로 하여 하나로 편찬되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재판사건을 보관하고 있다. 법원도서관(법원기록보존소)으로 일괄적으로 이관하면서 이 같은 부분을 묶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각 민사판결문은 1895년 이래로 각 재판기관별로 관리하다가 1907년 12월 재판소구성법을 제기한 전국적으로 새로운 재판소가 설치되면서 판결사건들이 같은 재판소에 이관되었다. 이 때 일부의 판결서가 편찬되었으며 편찬의 기준은 재판기관을 단위로 하였으나 일부는 판결서가 분실된 것으로 지역 단위로 묶인 경우도 있다.

(그림 5) 제3권 판결서

3) 민사판결서의 내적 질서

(1) 판결서의 내용 배열순서

1895년 민사소송법에서는 사건의 접수순서에 따라서 번호를 부여하고 그 순서에 따라서 심판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서 판결서의 번호는 해당 사건의 접수순서에 따라서 부여하였을 것이다. 다만, 판결은 철저(철저)한 후에 복원하기로 하여 낭관을 정하여 행할 수 있었으며 결심한 날부터 7일을 넘지 못하도록 하였다. 43) 따라서 판결서가 반드시 사건번호의 순서로 배열된다고 할 수는 없다. 실제로 판결서의 배열과 사건번호 간에는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1895년 판결서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제28권에는 109건의 판결서가 1895년 4월 22일 판결서로 시작하여 1896년 8월 17일 판결서로 종결된다. 각 판결서는 당해사 사건번호가 부각되어 있다. 판결서 번호를 일부 소개하면 72, 71, 61, 62, 75, 79, 93, 74, 90, 101, 103 등의 순서로 편찬되어 있다. 판결서가 사건번호순으로 배열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같은 날에 여러 사건을 판결한 경우에는 판결번호의 순으로 다시 나열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1895년 5월 7일의 판결서는 모두 3건인데 개국 504년 제101호, 제102호, 제103호 순으로 편찬되어 있다. 사건번호 제102호는 개국 504년 5월 19일 판결서에 부여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각각번호도 있다. 1895년 4월 22일 오조고(오조고)와 백령치의 판결서의 사건번호가 개국 504년 제102호이고 1895년 8월 17일 뮤직과의 판결서가 개국 504년 제103호이다. 44) 1895년에는 판결서를 제작하고 보존하는 방식은 개통된 정책하지 않아서 일부 오류가 나타났을 수 있으나 판결서의 배열순서는 사건번호와의 연관성이 약하다는 점은 분명하다.

판결서들은 낭관순으로 배열되어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특히, 제28권의 판결서들은 낭관순으로 잘 배열되어 있다. 첫 번째 판결서 낭관부터 소개하나
면, 4월 22일, 23일, 23일, 23일, 5월 4일, 4일, 5일, 6일, 7일, 7일, 7일, 7일, 초7일, 9일, 9일, 9일, 11일, 12일 등의 순서로 배달되어 있다. 하지만 번째로 납세수거를 임시히 지킨 것은 아니다. 제26권은 한성재산소 관서가 86건이
편찬되어 있는데 이 관찰서의 납세정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해당 관찰
서는 9월 1일 관찰서로 시작하여 9월 22일 관찰서가 끝 마지막에 편찬되어
있다. 그러나 9월 22일 관찰서 바로 직전에 10월 28일, 10월 27일의 관찰
서가 있고 다시 그 앞 장에는 11월 1일 관찰서가 편찬되어 있다.45

많은 관찰서들이 납세순으로 배달되어 있기는 하지만 일부 관찰서는 이 같은 순서를 지
키지 않았다. 이는 납세의 관찰서가 작성된 직후에 바로 순서대로 배달된 것
이 아니라 나중에 어느 시점에 정리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2) 재판 절차의 반영: 상소심 관찰서와 하급심 관찰서의 연계

재판기관에 따른 판결서가 하나의 문서로 구성된 사례로 제1심
과 제2심 제관이 연관된 경우이다. 제29권의 첫 번째 관찰서의 사건번호는
개국54년 6월 166호, 제67호, 제73호가 부여되어 있다. 사건번호는 하나만
붙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판결서에는 3개가 붙어 있다. 이 소송은 원고 김양
리, 이성근, 장치혁이 피고 김인환을 상대로 제기한 한성재산소의 재산-채무소
송이다. 원고들은 김인환을 상대로 각각 채무상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
었는데 재판소에서는 각 소송을 별개로 하나의 판결서로 작성하였기 때문
에 사건번호가 3개가 붙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 다음의 판결서는 개국
54년 5월 21일 제2호, 고등재판소 판결서이고 그 다음 판결서는 개국 54년
5월 20일 제1호, 고등재판소 판결서이다. 제1호 및 제2호 두 판결서는 앞서
제66호, 제67호, 제73호 한성재산소의 판결에 복속하여 이성원과 장재석이
소송을 제기한 고등재판소 판결서이다. 이 판결서는 납세수거로 되어 있지
않고 사전번호로 되어 있지 않지만 이 경우는 고등재판소가 보관하고
있던 하급심 관찰서들이 함께 합철되었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제1심 판결
서와 상소심 관찰서가 붙어 있게 된다. 이 사례와 같이 상소심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하급심 판결서가 함께 따르면서 관찰서들이 합철된다. 합철의 순서
는 제1심 판결서가 앞에 오고 그 다음에 제2심 판결서가 수록된다. 민형소송
규정에 따라서 하급심 판결서가 상급 재판소로 이송되었거나 상소자가 제1
심 판결서와의 등본을 받기까지로 제출하여 합철된 것으로 보인다.

제40권은 한성재판소
와 고등재판소 재판소
의 판결서가 합철되어
있는데 이 판결서는 고
등재판소(평리원)가 작
성 관리한 것으로 보
인다. 제2심과 제3심 판
결서가 모두 수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양 판결
서가 서로 붙어 있다.

그리나 일부 관찰서는
제1심 판결서가 누락되어 있다. 1899년 2월 8일 제8호 판결은 경기도 광주
부의 신재명(원고)과 같은 고용에 사는 이기철(피고), 행성부 거주 소오수(피
고)간의 분쟁인데 하급심 판결서가 누락되어 있으며 이러한 사실이 목차에
"일심판결서-판례"라고 표기되어 있다. 이는 한성재판소 판결 이후에
제조자가 상소하였는데 해당 판결서를 고등재판소로 이송하지 않았거나 관
리상의 이유로 이에 분명한 것이다.

반대의 경우도 있다. 제40권에 있는 1899년 11월 15일 판결은 박창거와
김성룡이 쟁점하였는데 한성부재판소가 판결한 관찰서는 있으나, 이에 관한
상급심 판결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한성부재판소 판결에 승복하지 못하여 평
리원 판결서가 상소하였으나 평리원 판결서가 없는 경우이다. 상소심(평리원 또는
고등재판소) 판결서가 당연히 있어야 할에도 불구하고 판결서가 없는 것도
방해하게 분명한 의미한다. 이처럼 상소심 판결서가 없는 경우에 제49권 목

---

45)『독립민주평양연합』(제29권)
차의 비고란에 해당 사실을 “여성판결(여성판결)"이라고 표기하였다. 이는 목적을 자극하는 시점에 일부 판결사가 없음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리고 한성재판소 판결사와 고등재판소 판결사가 함께 편철되어 있는 경우 비고란에 하급심 판결사를 “등본(등본)”으로 표기한 경우도 있다.46) 이는 제1심 재판기관인 한성재판소의 판결사를 등본(등본)으로 받아서 고등재판소에 제출한 것을 보여준다.

(3) 판결서의 위치 변경을 통한 재판철

민사판결의 표지와 목자 률 조선총독부 또는 1908년 신재판소에서 수행한 것이라면 대법재판 기 판결서 고등과 지 조선총독부가 재정리한 것인지, 아니면 대법재판 제판소가 편철한 판결서에 목자와 표지만을 부착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제66권과 제68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제66권은 1907년 4월 5일까지 생산된 한성재판소의 판결서 90건이 편철되어 있다. 표지 이면에는 조선총독부 판결이 표기되어 있는 데 목자에 가족번호 제74호의 한성제판소의 판결사가 있다. 원고는 하야차 왕(하야차왕)이고 피고는 김진혁(金鎭赫)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중간에 몇은 선으로 짜은 표자가 남아 있다.47) 결과적으로 제66권에는 이 판결서는 존재하지 않으며 제68권에 편철되어 있었다.48) 제68권은 제1심 재판소와 상소심 재판소의 판결사가 편철되어 있다. 이는 제66권을 편철한 당시에 해당 판결 서를 제66권에 인입하였다가 재정리하여 제68권으로 판철하였기 때문이다. 제68권으로 변경하러 했던 이유는 상소심 판결사가 없다는 것을 추후에 알았기 때문인 것이다. 즉, 제66권은 1907년 4월 1일 판결서부터 1907년 5월 31일까지 한성재판소 판결서만을 수록하고 있으나 제68권은 1907년 1월 2일 판결서부터 1907년 12월까지의 평리원 판결서(1908년 판결서 1권)와 제2심 판결서가 함께 편철되어 있다.49) 제68권에는 하야차왕(하야차왕)과 김진혁(金鎭赫)의 한성재판소 판결서와 평리원 판결서가 모두 수록되어 있다. 이것은 해당 판결서들이 처음부터 판철된 형태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개별 판결서 형태로 있다는 시점에서 한계에서 편철하는 과정에서 제66권에서 제68권으로 변경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아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이 판결서의 위치가 변경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는 최재철-정의동, 이호희 외 1인-박정근, 이석교-김진식 사례에도 나타난다. 제66권 목차에 최재철-정의동, 이호희 외 1인- 박정근, 이석교-김진식의 판결서가 기재되어 있다가 봉은 석으로 삭제된 흔적이 있다. 이 3종의 판결서도 모두 제68권으로 이동되어 있다. 이 중에서 이석교-김진식 판결서는 제1심 판결안과 제2심 판결서가 없다는 점이 비고란에 표기되어 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대법재판 제판소에서는 해당 판결서들을 생산하였고 편철한 방식으로 관리하였다. 다만, 해당 판결서들은 판결이 안된 상태로 놓여 있다가 1908년 신재판소 설정 이후 또는 조선총독부가 판결서들을 입수한 후에 재정리하여 목자 및 표지를 덧붙여서 함께 편철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는 대법재판 제판소에서 편철한 것을 추후에 조선총독부가 목자 및 표지를 덧붙여야만 경우도 있을 것이다. 적어도 이 경우에는 대법재판

46) "조선 민사판결서(조선 민사판결서)".

47) "조선 민사판결서(조선 민사판결서)".

48) "조선 민사판결서(조선 민사판결서)".

49) "한성재판소의 판결서(한성재판소의 판결서)".
재판소의 관할권을 해철한 후에 다시 판단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

2. 민사판결의 기술(記述) 항목 분석

일부의 민사판결에서는 수록된 판결서의 정보를 나타내는 목차가 붙어 있었다. 제29권에는 목차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문서(件), 기록(記録), 원고, 피고, 사건명(事件名), 재판소, 비고 등 7종이다. 이 중에서 먼저 판결서를 양식으로 정립된 상태에서 두목을 1면으로 제작하여 붙기하였다. 기록(記録)는 판결서 원본에 표기되어 있는 사건번호를 가리킨다. 예컨대, "判決(判決) 〇〇年〇月〇日〇〇號" 또는 "判決書第〇〇號" 등으로 표기되었다. 1895년 민정소송 규정에 따르면 사건번호는 접수문서에 따라서 붙이고 판결서가 작성되면서 기록되었다.

사건명(事件名)은 판결서의 제목이다. 원가판결서를 작성한 판사는 판결서의 제목을 붙이지 아니하였는데 나중에 판결서의 표지와 목차를 새롭게 편성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붙어 한 것이다. 비고에는 관리상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겠는데 주로 결제사건 여부, 제1심 또는 제2심 판결서 수록 여부 등이 기재되었다. 1907년 이후에는 소명(訴名) 51 또는 사건표목 52으로 변경된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목차 서술은 지나치게 소소하여 이용자들이 해당 판결서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국 법원도서관에서 판결서들 중 DB로 구축하면서 판결서 정보를 추출하는 작업을 하였다. 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민사 판결서 정보는 11항목이다. 사건번호, 문서 유형, 사건명, 원고(상명, 나이, 신분, 주소, 대리인), 피고(상명, 나이, 신분, 주소, 대리인), 판결 요지, 이유, 판결일자, 재판소명, 판사명, 참여자명(재판소 직원명) 등이다. 이 항목 중에서 판결서 원본에 없는 사항에 판결서의 제목이다. 판결서 제목은 이용자들의 검색에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판결서 내용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다른 한편으로는 판결서 원본과 목차에 새롭게 부기된 정보가 있는데 이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1) 조선총독부에서 영명한 사건 제목의 문제

모든 판결서 목차가 붙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판결서에는 빈 항상에 목차가 실려 있는 경우가 있다. 목차 정보에는 사건목록이 붙어 있는데 판단서 원본에는 없는 사항이다. 이는 판결서의 편집 후 어느 시점에 판결하는 과정에서 판결서의 내용을 보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사건목록을 별도로 붙인 것이다. 하지만 조선총독부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판결서 목차에는 일부 사항의 오류 또는 오기가 있다. 예컨대, 1896년 8월 5일의 제276호 판결서가 좋은 사례이다. 이 판결은 조선총독부가 작성한 사건목록(事件目)에는 "判決书第〇〇号"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법원도서관에서도 이 같은 제목을 그대로 인용하여 "判決書第〇〇号에 관한 건"이라는 제목을 붙였다. 53) 해당 판결서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判決의摘要

被告는 原告 訴訴에 原告당한 理由가 無故 訴訴費用은 被告의 擔当者。

50) 『『新潮未末期判決文(第29卷)』』
51) 『『新潮未末期判決文(第151卷)』』
52) 『『新潮未末期判決文(第14卷)』』
53) 『『新潮未末期判決文(第20卷)』』
가족전세(家賃)에 관한 건54)

判決의 취지

被告는 原告 訴求에 唐럭아 家賃 及 一百七十五兩을 賄賂평이 可能 訴訟費用에

被告의 慰め

理由

原告의 主張은 締結에 照화 아 其正直로 捨去 認定 此에 鍔む아 原告의 勝訴은

銀行之庭を 타이완에 就て 付金이나 原告가 優れ賄賂하고 速去者에 傷害

졌어서는 其不必然な 額하여 欠陥에 依る 付金 正

直이라고 捨去 아야니 因하여 原告의 訴請是其理由が 捨去

이 사건은 관계사의 品質文書를 보먼 素晴(素質)과는 관계가 없다. 이 実

弁護인에서 사건의 判決を 悔いながら 織物を 売却하여 依する 資本を 担保하여

判決를 失う

모든 관계사가 如한 것은 かじか減じて 予備에 不応有する

判決書의 文書

法院에서 審判した 案件 及び의

判決서에서 訴訟文書를 공개하으면 관계서의 個性 정보를 별도로

判決書의 警告

1897년

7월 24일 元首政統 及與760호 관계서가 그 것이다. 此事件は 元首 警報에

依附する 訴訟書는 元首 政府에 警報한 元首を 就て 原告

関係書의 水書 警告的 警報

 많은 民事판결서 원판에 依附于元首 警報書が 訴訟한 案件文書에 관계서

54)『法院民事裁判事例(法院・裁判事例)』.
55)判決書第50号, 『法院民事裁判事例(法院・裁判事例)』.
석 바탕에 새로운 번호를 부여한 흔적이 있다. 예컨대 8월 10일, 11일, 12일, 13일 등이다. 이러한 번호도 관계자의 목차 및 편찬이 주 후에 이루어졌음을 알게라는 흔적이었다. 이들 제66권에 수록되어 있는 제63호 결정판결서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제66권 정부 11년 4월 3일 판결록에는 유인형과 이종유의 판결서가 있는데 판결서의 안쪽에 제63호가 쓰인 글씨로 표기되어 있다. 그리고 서식 위쪽에 붙은 글씨로 “光十一民3179”호가 표기되어 있다. 제63호 판결서를 작성하면서 부여된 것이기 때문에 판결서의 서식에 정착되어 있다. 제66권의 앞쪽에 붙어있는 목차에는 같은 글씨로 제63호, 그 앞에 붙은 글씨로 “光十一民2079”호가 표기되어 판결서 원본의 번호와 동일하다. 제151권에도 같은 추가된 관리번호가 있다. 목차에는 각 판결서의 사건번호가 1번부터 29번까지 가려서 해택자에 따라 판결서 원본에는 이 사건번호가 기록되지 않았다. 그 대신에 판결서 밑면에 사건번호를 나중에 추가한 흔적이 있다. 이 밑면의 번호와 목차의 사건번호가 일치하는데 이는 나중에 목차를 편성하면서 사건번호를 부여한 것임을 보여준다. 특이한 점은, 비고란에 “判決書屬(判決書属)”으로 표기되어 있는

![그림 9] 민사판결록 제66권

판결사가 있다. 목차상에는 사건의 정보(원고, 피고, 사건제목, 판결일)가 모두 기재되어 있으나 정적 판결서는 없는 것이다. 이는 해당 판결서 외에 별도의 장부가 있어서 해당 장부를 참고로 사건정보를 기재한 목차를 편성하였으나 관리원은 분실하여 해당 사실을 그대로 표기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 이유로 편차를 제작할 당시에 일부의 관리사가 유실된 것이다.

![그림 10, 2] 민사판결록 제55권의 목차 및 판결서

![그림 11] 민사판결록 제66권

4) 일본의 사법검찰의 흔적

대한제국기 일본 판결서에는 일본의 사법검찰의 흔적이 드러나 있는 경우가 있다. 일본인 법무보호관(15명) 및 법무보호관 보수(12명)들은 이로 하여부미의 사법개혁 구상에 따라서 1906년 12월에 임용되었고 1907년 7월부터 직무를 시작하였다. 이들은 단순히 사법사무의 보수에 그친 것이 아니라 민형사사건의 재판과 관계에 직접 관여하였다. 이러한 사실이 관결서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다. 야스미 도키

56) 「朝鮮末民判決法文」(제90권), 57) 「朝鮮末民判決法文」(제29권), 58) 문중영, 「朝鮮法務獬外裁判書の変化」, 「법학논고」39(경복대 법학연구원, 2016).
타로(安住時次郎)는 한성재판소에서 근무하였는데 제6권 제78호 판결서시의 위촉 부분에 어느 이상을 도끼타로이라는 일본인 법무보좌관의 직이 적혀 있다. 이는 판결서의 작성에도 일본인 법무보좌관이 개입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나바가 1908년부터는 일본인들이 판사, 검사 및 서기로 직업임용되었으며 판결서가 일본인로 작성한 사례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일본인 판사가 직접 재판에 나서면서 판결서의 작성과 내용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해외재판소 민사판결서는 사법제도의 균형화와 양상뿐만 아니라 일본의 사법 체제의 양상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8 행정구역의 오기
1985년 5월 20일 제1호 판결서는 장기자와 김인환의 소송에 대한 판결을 담고 있다. 그림에 법원소관서에서 제공하고 있는 판결서 정보에는 각 원고 및 피고의 주소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경성(京城) 북부(北부) 가회방(告會坊) 제동재(提倡尉) 안동(安東)  
경성(京城) 중부(中部) 수관방(首關坊) 상동재(上東尉) 양천(陽川)

당시 행정구역으로는 한성부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경성으로 고친 것이다. 이는 역사적 사실을 오해한 것에 비춰진다. 원문에는 "북부(北) 가회방(告會坊) 제동재(提倡尉) 안동(安東), "중부(中) 수관방(首關坊) 상동재(上東尉) 양천(陽川)" 등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를 한성부로 변경하거나 원문 그대로 서술하려 한다.  

4. 맺음말
근대 민사판결서는 대한제국의 일상생활과 더불어 1895년 이래의 사법제도의 균형적 변화 및 일제 사법참약의 혼란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 이 점에 주목하여 관련 학계에서는 판결서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을 분석하여 대한제국의 법 습행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1895년 이후의 사법상의 변화는 판결서의 서식, 편집 및 문류의 과정, 표지와 목차의 제작 과정 등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으며 현재 법원에 소장되어 있는 판결서를 활용하기에 앞서 이에 대한 신중한 관찰과 조사가 필요하다.

우선, 법원기록보존소에 소장되어 있는 판결서는 1895년 재판소구성법, 재판소처우규정등칙, 민형소송규정, 재판소세칙 등의 법규에 의하여 변환된 재판사무작업 및 판결서가 반영되어 있다. 새로운 재판소에서는 임금 사양관과 재판소 서기 등 사항관료가 입원하기도 하였고 종전과는 다르게 민사소송이 이루어졌나 비록, 이 시기에는 행정과 사법의 분리가 재대로 관리되지 못하였고 재판인력의 전문화도 충분히 달성되지 못하는 등이 한계였으나 한국정부는 임원의 범위를 제한하여 새로운 재판제도도 도입을 원하였다. 이에 따라서 민사소송의 절차 및 법원의 관리, 판결서의 서식과 판결 양식 등이 크게 정비되었다.

특히, 1895년 민형소송규정에 의하여 판결서 한국어도 재판소가 보존, 관리하는 것으로 변한사리에서 판결서는 재판소가 보존하였던 재판소구성법에 대비한 민사판결서가 남아 있게 되었으며 보존, 관리한 책정도 부과되었다. 이 판결서들은 처음, 1895년 이래로 각 재판기가 남장 형식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어느 시점에 편찬되었다. 1907년 재판소구성법의 전부 개정에 따라서 1908년부터 새롭게 설립되기 시작한 주요 재판소에서 편찬한 사례였고, 1910년 한국법원에 이어 소송총독부가 편찬한 경우도 있다. 따라서 판결서 한국어는 작성된 시기 및 주제와 표지 및 목차와 작성한 시기 및 주제와 서로 다르다.

결론, 편찬하는 기준은 재판기록이었다. 상소심 재판기록의 경우에는 허급 심 판결서가 합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는 제2심 재판소가 관할  

59) 이 재판서 수부판서는 이행회, 판사는 윤병헌, 이유상, 이원국이고 부서는 정병조였다.  
60)「표준民事判決文(표29쪽).」
하나의 다양한 지역의 관절사가 합쳐져 있게 된다. 다만, 관절사의 수가 적어도 채택기준 단위로 편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찰지역을 중심으로 합쳐하였다.

셋째, 관절사의 수록 순서는 관질선모임에 의한 경우가 많았다. 모든 관절 사가 남아있는거리로 정확히 배열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작용하는 기준 암에는 들렸었다. 관절사에 부착되어 있는 사건번호는 관절사의 편찬 순서에서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하였다.

넷째, 목차의 구성 요소도 시기에 따라 일부 변화하였다. 목차는 관절사를 작성한 사람들에게 제작된 것이 아니라 1908년 이후부터 조선총독부 전반기에 이르는 어느 시점에서 편찬되면서 만들어졌으며, 검색의 필요성을 위하여 사건의 제목을 별도로 추가 작성하였다. 그러나 목차에 표기된 사건목록이 관절사의 내용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사례가 일부 발견되었다. 만약 아니라 민사관계사의 기본정보 입력에서 일부 오류 및 누락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섯째, 관절사가 만들어진 이후에 관절사의 사례에서는 사건번호 외에 별도의 번호가 부기된 경우가 많다. 이 번호는 관절사를 편찬하면서 표지와 목차를 편찬하는 과정에서 새로이 부기되었던 것이다.

여섯째, 대한제국기 재판소의 관절사가 일부만이 공개되고 있다. 현재 법원도서관 홈페이지에는 서울, 경기, 인천(강화), 충청(광주) 지역의 관절사 151권이 공개되었을 뿐,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지역의 관절사는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다. 법원기록보존소에는 1895~1910년 사이에 생산된 관절목록이 약 400여권이 보관되어 있는데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아서 접근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민사판결목록에는 다양한 기록관리 혼란이 많아 있다. 법관 관절사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표지의 의미와 두드 파악하기는 어렵고, 관할 기관이나 관절사의 배열 순서 등에서 단일한 원칙이 일관되게 관절되지 못하는 예외현상이 많이 발견하기도 한다. 이는 사용범도가 활동적으로 정비되지 않은 탓도 있었으나, 관절사를 작성하면서 편찬되지 못하고 상당 기간 개별 관절사 형태로 남아 있었던 1908년 또는 조선총독부 설치 초기에 일관하여 관절사를 편찬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의 민사판결목록은 1895 년부터 시작되기까지, 더 나아가면 해방 후 병설에서의 관리상의 변동을 반영하고 있다. 근대 민사판결목록은 균형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절사에 기록되어 있는 다양한 역사의 흔적을 고려하면서 활용하여야 한다.
An Analysis on the Filing and Description of The Decisions in Modern Korea

Lee, Seung Il

The judicial archives in South Korea have a lot of the decisions. The records are for civil disputes over lands, houses, pawns, commercial transactions, etc. In particular, they have a rich stock of socioeconomic information such as the prices and rents of lands and houses, the interest rates and pawns, and therefore can be an archival collection that well shows the social state during the transition to the modern times.

The decisions left the traces of various records made while the judicial system was undergoing changes and Korea was being invaded by Japan. Thus, the decisions need to be studied in light of such changes. Hereat, this study reviewed the present state of the decisions as well as the process for its filing and arrangement so as to provide basic information for studies on the decisions.

[Key Words] Court, The decisions, Filing, Description, Judicial Archives

* Assistant Professor, Dept. of History,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